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 시내버스 보조금 ↓ 마을버스 도입해야 ”

양영환 의원 “보조금 연간 300억 대채없이 퍼주기만  
지선에 시내·간선에 마을버스로 예산 절감 효과”

급증하고 있는 전주시내 버스 보조금을 줄이고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노선의 시간간격 제정과 함께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등)은 지난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시가 검토했던 시간간격을 활용한 시내버스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예산절감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단일화된 시내버스 노선을 도심지(지선)와 마을



주변(간선)으로 구분, 버스를 운행할 경우 노선 버스 대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은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간간격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시내버스 시간간격 도입은 전주시가 대중교통 개선책의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양 의원은 ‘시내버스 시간간격 도입은 전주시가 대중교통 개선책의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상 완주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간간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이 2016년 205억원에서 2018년에는 무려 310억원으로 2년만에 100억원 이상이 늘어났다고 전제 한 뒤, “이런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불친절과 정류장 무정차, 난폭운전 등 서비스 개선은 제자리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또,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전주시내 도심지를 벗어나면 승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근본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시내버스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보조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양 의원은 “마을버스를 도입할 경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주시가 직영할 것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화학물질 발생 사고 대비 제도 정비해야”

“시, 팔복동 공단 지역 환경오염도 높은 업종 신규 유입 제한”  
김윤권 의원, 화학사고 대비·대응 위한 관리 조례 제정 촉구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여간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28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이나 질병을 한 재해자는 4만9천 845명이었다.

이중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나 화학물질누출·접촉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재해자도 2,169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깨우며, 전주시의회에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 조례에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공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물질사고 대비 대응계획 수립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주시에서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포함,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송효철 기자



‘특례시로 답대한 전주’ 전주시는 22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완산구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로 답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속으로!’를 주제로 ‘2019 완산구 지혜의 원탁’을 개최했다.

# ‘전주도 이제는 수소경제다’

시, 청원 공감한마당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수소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중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열고 전주시 수소산업을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청원공감한마당 행사에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을 강사로 초청해 ‘수소경제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신 단장은 수소 경제가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발전 증가 △국내 성장 동력 약화를 손꼽았다.

이어 그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 자체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 기조를 고려한다면 결국 해답은 재생에너지를 찾는 것뿐”이라며 “하루빨리 수소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또 “수소경제는 수소생산

저장·이송·이용 등 수소산업의 가치 사슬이 형성되면 우리나라의 잠정적 자동차, 조선, IT산업 등과 연계 시 전후방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전주시가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소경제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민간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가 지역에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영상이 상영되어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에 대응하고 향후 전주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중장기 로드맵인 ‘전주시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수소차와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난방, 교통 등 관내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가기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햇볕은 쨍쨍’... 에너지자립도시 전주 밝힌다

시민햇빛발전소 발전 가동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23일 효자배수지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혜숙 전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전주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제1호 전주 시민햇빛발전소는 효자동2가·삼천동3가 일대의 효자배수지 약 2245㎡ 부지에 건립된 발전용량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다.

효자배수지에 조성된 시민햇빛발전소는 연간 12만4100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7구가 한 달에 평균 300kWh의 전력

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34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통해 갖나무 485그루를 심어야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자립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가 건립됨에 따라 그간 에너지 소비자였던 시민들이 스스로 친환경에너지의 생산자가 돼 에너지를 소비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통해 시민햇빛발전소 추가 건립 출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 에너지계획이자 에너지 자립운동인 ‘에너지디자인 3040’을 수립했으며,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

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핵심목표 과제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참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2호기 추가 건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햇빛발전소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은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홈페이지(www.etur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립에 참여를 원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은 시민은 전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063-281-295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

전주시가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빈집 임대주택과 주민쉼터, 공동텃밭,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방화 등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도심지역 빈집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올해 총 1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임대주택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값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대상지에 6개월 이상 공기도 포함시키고, 빈집 실태 조사 용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민주노총, 3·6 총파업 이어 3월말 노동자대회 열기로

민주노총이 당초 예정된 3월 6일 총파업에 이어 같은 달 하순에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3월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총력투쟁을

전개한 뒤 3월 말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조직을 본격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가맹·산하 조직별로 국회 앞 집중투

쟁을 순차적으로 전개해 다양한 대 국회 투쟁과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임원 등 지도부도 3월6일 이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고, 김영환 위원장을 중심으로는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순회를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말에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포함한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스시

# 군대서 후임병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모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양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을 법정에서 나오게 해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 전북경찰, 여성청소년 중간 관리자 공감 워크숍

전북경찰이 여성청소년 중간 관리자 공감 워크숍을 열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벌관교 육센터에서 도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 관리자 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조, 피해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현안업무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는 취지다.

이날 참석한 강인철 전북청장은 “간사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석훈 기자